국 내

동북아 에너지협력 새 패러다임 찾는다

국제심포지엄 25일 COEX...안정적 에너지 확보방안 논의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월 25일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 도전과 전략"을 주제로 "동북아 에너지협력 국제심포지엄"이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3월 에너지경제연구원내에 설립된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으로, 이희범 산자부 장관,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내외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동북아 역내 국가간 에너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방안과 중국경제의 부상,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정책 변화 등 새롭게 전개되는 역내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동북아 에너지협력 활동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조망하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희범 장관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 역내 에너지수요의 증가와 에너지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공동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주창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의 중장기 에너지자원 개발 전략과 역내 자원 소비국들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조망하고,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체 구성 추진방향과 동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 석유가스를 둘러싼 현안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심포지엄 세션1에서는 "에너지 안보전략 : 동북아 공동번영의 전제조건"을 주제로 러시아의 자원개발 전략과 역내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전략이 발표되었고, 세션2에서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계"를 주제로 역내 자원개발 협력의 지정학적 특성과 공동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세션3에서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 에너지자원 활용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러시아의 시베리아-태평양간 송유관건설 프로젝트와 통합가스공급시스템(UGSS) 구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참여구조 등이 발표되었다.

산자부 문재도 자원정책과장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간 실질적인 에너지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신 · 재생에너지사업에 총 3,259억원 지원

신 · 재생에너지 사업에 올해 총 3,259억원이 투입되고 현재 2.3%의 비중이 올해말까지 2.63%까지 확대된다.

산자부는 3월 24일 "신 ·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올해 "신 · 재생에너지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총 3,259억원(전년대비 66% 증가)을 투자해 2.3%인 신 · 재생에너지비중을 연말까지 2.63%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정비해 보급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산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화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파트 등 집단주거시설에 대한 태양광 보급, 해상풍력 개발, 바이오디젤 보급확대, 태양열 A/S체제 구축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기업제, 부품 표준화 · 공용화,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타 지원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경제"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를 "수소경제 원년"으로 삼아 기술개발 및 시범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사

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소경제 이행시나리오, 기술개발 및 산업화 로드맵 등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방침이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 수요 급격 증가?

올해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에 대한 수요가 3월 22일 말 기준 2,294억원으로 작년대비 무려 126% 증가하는 등 급격히 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처럼 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최근 고유가의 지속과 교토의정서 발효 등으로 인해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자발적협약 확대, ESCO사업 지원강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인것으로 분석했다.

현재까지 자금의 추천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ESCO사업 373억원(390.7%증가), 산업체절약시설설치 574억원(20.5%증가), 자발적협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192억원(35.2%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ESCO*사업은 과거 조명설비 등 단순 설비 개체에서 산업체 · 건물의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및 공정개선 등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돼 자금추천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산자부는 평가했다.

산자부 허경 에너지관리과장은 "올해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이 총 4,580억원으로 작년보다 61.7% 증가한 규모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금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6월에 자금이 소진돼 450억원의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한 바 있다.

한편 올해도 자금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경제정책조정회의(18일)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에너지위기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자금의 30%인 1,374억원을 할당해 우선 지원토록 조치했으며, 향후 자금집행 상황에 따라 할당금액을 조정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자금수요에 관계없이 1,374억원에 한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올해 9월까지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고 하며, 에너지사용자가 기존의 노후시설에 먼저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작년말 현재 159개업체)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 출범

정부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작업에 가속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3월 11일 브리핑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한갑수 산업경제연구원장)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부지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각계의 명망 있는 민간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으며, 과학 · 기술, 인문 · 사회,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고르게 안배되도록 했다.

위원장은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하고 조정능력이 탁월한 한갑수(전 농림부 장관)이 위촉됐으며, 지질, 원자력, 환경 등 과학 · 기술 분야 4인과 정치, 경영, 행정, 사회학 등 인문 · 사회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4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언론인 4인과 변호사 1인도 포함해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며, 추천 결과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인사 3인

도 참여하기로 했다.

산자부 정승일 방사성폐기물과장은 "부지선정위원회는 앞으로 부지선정 절차의 심의, 부지적합성 검증, 주민투표 대상지역 선정(필요시 여론조사 관리), 최종 후보부지 선정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의 제반절차를 관리 ·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 이라면서 "정부와 사업자의 일방적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부지선정위원회가 명실공히 선정절차를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참고로 본 위원회는 부지선정 절차심의 등을 시작으로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및 방폐물 관리시설 실태점검, 해외전문가(IAEA등) 초청 간담회, 지역사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부지선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韓電, 분단이후 최초로 남한의 전력을 북한지역에 공급

한국전력공사는 3월 16일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인 신원(주), SJ-GS,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3개 기관에 전력공급을 개시하였다. 그동안 입주 기업들은 자가발전기를 가동하여 전력을 공급받았으나, 한전의 전기가 개통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은 한전이 설계 · 시공부터 운영까지 모든 전력공급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로 북측과 합의하였다. 한전에서 개성공단에 공급할 전력공급 방식은 시범단지는 22,900볼트 배전선로로 공급하고, 이어서 공단 1단계 100만평이 개발되는 2007년경에는 154,000볼트 송전선로로 공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04.4~12) 한전은 북측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총국장 주동찬)과 총 7차례의 협상을 거쳐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04.12.3)하였다. 이에 앞서 한전은 북측과 협상지연을 대비하여 지난해 9.30일에 남측구간(약15㎞)에 대해 배전선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북측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1.26부터 배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해 3월4일에 준공하여 선로시험가압을 완료하였으나, 업체의 공장 수전설비 공사가 늦어진데다, 특고압 전기공급에 따른 사용전 검사 등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3.16일에 정식 공급하게 되었다. 향후 2007년경 1단계 100만평에 공급할 154kV 송전선로 공사도 현재 경과지 선정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다.

금번 전력공급 개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전력공급을 넘어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측의 전기가 휴전선을 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산업자원부, 「전력IT 기획단」발족

- 8대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기술로드맵과 개발전략 도출

- 민관합동으로 향후 5년간 5,000억원 투입 목표

- '기술개발', '사업화 투자', '공공기관 우선구매' 연계를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

산업자원부는 3월 2일 「전력IT기획단」을 발족하고, 전력IT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과제기획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에 IT 기술접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전력 IT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관련 산 · 학 · 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전력IT기획단」을 구성하여, 전력 IT 분야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할 계획 (향후 3개월간 작업예정)이다. 「전력IT 기획단」은 8대 사업분야와 총괄 분과로 구성되고,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산 · 학 · 연, 90여명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한다.

이번 기획단을 통해 발굴되는 연구개발 과제는 전력산업기

반기금 등 정부지원, 민간기업 대응투자 등 총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발굴된 과제는 금년 6월경 과제공고를 거쳐, 7월에는 각 연구개발 사업기관을 선정하여, 향후 3~5년간 중장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8대 사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배전지능화 시스템 : 배전선로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지능화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고장시 최단시간 복구 및 전력품질의 획기적 향상 도모
2.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변전시스템 개발 : 무인검침과 소형화, 디지털화를 통한 자동복구 및 이상신호 검침 등의 기능을 가진 변전소 개발과, 변전소 상호간의 연계와 통신을 통하여 정전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의 부여
3. 대용량 전력수송 시스템 : 송전방식의 개선으로 현 송전망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는 전력량을 획기적으로 확대(30%이상 개선 목표)하고 환경문제와 NIMBY 현상에 따른 신규 전력설비 구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4. Multi-Agent 기반 지능형 전력정보 시스템 : 광역 전력인프라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전등 전기사고 예방 및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첨단 신뢰성 공학에 기반을 둔 효율적인 유지보수관리 방식을 개발하여 유지보수 비용의 획기적으로 절감
5. 능동형 전력 텔레메트릭스 개발 : 반도체와 센서기술을 결합하여 원격감시와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한 텔레메트릭스 기술을 전력산업에 결합하여, 전기화재방지, 재난대비, 산업재해방지 등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6. 전력선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통신망 구현 : 고속 전력선 통신(PLC) 기술력을 높여 상용화를 앞당김으로써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력망의 확대, 홈 네트워크의 구축 및 유비쿼터스 인프라로서의 근간 확대
7. 대수용가용 전력자원 Total Solution 개발 : 대수용가 자원의 최적관리와 지능형 네트워크 개념의 융합을 통하여, 대수용가의 전력비용의 획기적 절감 및 효율성 향상, 환경보호 등을 도모
8. 경쟁적환경을 위한 전력거래 운영시스템 : 경쟁적 전력거래 및 시장운영 시스템 개발,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 개발

동 행사에서 산업자원부 고정식 에너지산업심의관은 종래 성숙산업으로 인식되었던 전력 · 전기산업 분야도 IT기술이 접목될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도 이러한 전력IT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전력IT 분야 연구개발은 전력IT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기획단은 전력IT기술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앞으로의 기술개발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4년 12월 「전력IT 추진 종합대책」의 발표를 시작으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획단 발족을 통해 전력IT 핵심 연구과제의 발굴, 연구개발 수행으로 전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침체된 전력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개발기술이 최종 상용화되어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력분야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 투자지원', '개발된 신기술제품의 한전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3개 방향을 유기적 연계시켜 기술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기술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한전등 공공기관의 신기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전력분야 수요 대기업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의 확대 및 수요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등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전브랜드를 바탕으로 한전-중전기기 업체의 연계를 통한 해외시장 동반진출 (Turn-Key Base의 해외 전력인프라 수주 사업등)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 IT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금년 상반기중 「전력 IT 인력양성 센터」구축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해 외

三菱電機 중전부문을 분할

三菱電機 는 24일 중전분야를 담당하는 사회인프라 사업본부를 4월 1일부로 전력 · 산업사업에 대응하는 전력 · 산업시스템 사업본부와 공공 · 교통사업에 대응하는 사회시스템사업본부로 분할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의 사회인프라 사업본부에서는 전력, 공급, 교통의 3분야를 관장하고 있는데 사업환경에 대응하는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시책의 전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할 · 재편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중전메이커로서는 작년 2월에 日立製作所가 중전부문을 전력과 전기의 각 그룹으로 분할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원자력개발 재개를 시사하는 움직임

1990년에 최후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여 '탈원자력 개발' 에 선수를 쳤던 이탈리아에서 원자력발전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부상하였다.

우선 벨루스코니 수상의 입에서 원자력발전옵션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이 튀어나왔다. 1월 하순,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잇는 송전선의 오프닝세레모니에서 표명한 것으로 수상은 내년 선거에서 재선되면 원자력발전에 관한 논의를 재개할 생각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벨루스코니 수상은 '탈원발' 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탈리아의 전력코스트는 주변국가에 비하여 20~30%나 비싸 이것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삭감하고 있다는 견해도 표시하였다.

이탈리아 국내에서의 원자력발전개시로 이어질 것 같은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다. 파이낸셜타이지는 2월 하순 EPR(구주가압수형로)의 건설프로젝트에 이탈리아전력공사(ENEL)가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2월 23일에는 EDF와 ENEL간에 원자력발전부야에서의 협력도 포함하여 양사가 프랑스 국내를 비롯하여 구주내에서 공통의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조사하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라든가 금후의 스케줄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ENEL로서는 탈원발정책에 의해 잃어버렸던 원자력발전에 대한 노하우를 EPR프로젝트에의 참가로 다시 취득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소비전력량 약 3천억Kwh중 17%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발전비율이 높은 프랑스와 스위스로부터의 것이 전체의 85% 정도를 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3년 9월 스위스와 연결되는 송전선사고로 대규모정전을 겪는 등 전력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

인도 석탄부족

가격인상에 기업 거센 반발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3위의 석탄생산국이다. 석탄생산량은 70년대의 약7천만톤에서 2003~2004년도에는 3억5,550만톤으로 증대하였다. 총 생산량의 81%이상은 노천광으로 그 대부분은 연간 생산능력 1,000만톤 이상의 탄광이다.

인도의 전력공급은 석탄화력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2004년 2월말 현재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1억1,238만kW로 전원별 내역은 화력 7,793만kW(70%), 수력 2,286만kW, 원자력 272만kW, 풍력 187만kW, 화력 중 석탄발전설비는 6,46만kW를 점하고 있다. 2003~2004년도의 화력발전소의 부하율은 전국 평균 73%로 과거 5년간에 8.2%가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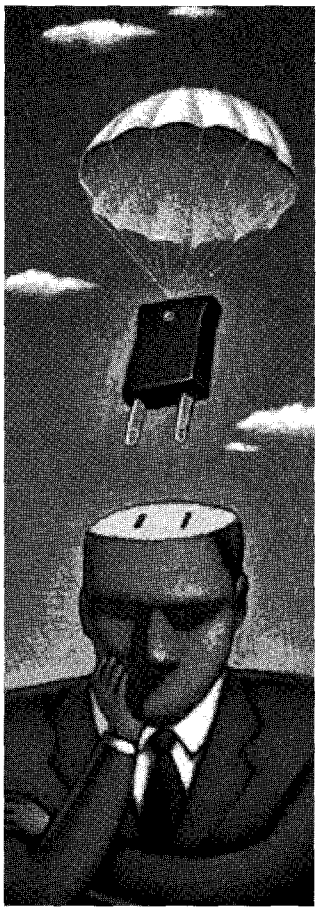
경기호조로 2004년 5월에는 석탄부족이 현재화(顯在化)하여 국유석탄공사는 6월 16일 모든 그레이드의 석탄가격을 평균 16.7% 인상하였다. 여기에 발전, 철강 등의 기업이 맹반발, 7월 24일에 석탄상은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또 정부는 11월 석탄수요압박을 고려하여 IPP프로젝트 5건

과 시멘트공장확장프로젝트 10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석탄성은 매월 석탄비축량이 7일 미만인 발전소를 공표하고 있으며 그 지점수는 25개소 정도에 이른다.

1996년 2월에 정부는 국유석탄공사와 정부계 SCCL사가 생산하는 일반탄의 모든 그레이드 및 연료탄의 A, B, C 각 그레이드를 대상으로 가격설정을 자유화(A는 최고그레이드), 나아가 1997년 3월까지에는 연료탄의 D~G그레이드를 자유화하였다.

한편 신석탄규칙을 2000년 1월 1일에 시행. 석탄의 수출입 규제는 폐지되고 자유일반라이센스의 대상품목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2003~2004년도의 총수입량으는 2,350만톤으로 석탄 제품별 수입량은 ① 일반탄 1,200만톤 ② 연료탄 950만톤 ③ 코크스용탄 200만톤에 달하였다. 이에 비하여 주변 국가에의 연간 석탄수출량은 수만톤으로 소규모이다.



중국, 1차에너지 총생산 15%증가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200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통계공보」에 의하면 2004년의 1차에너지 총생산은 18억 4,600만톤(석탄환산)으로 전년보다 15.2%증가하였다. 발전량은 2조1,870kWh로 전년을 14.5%상회하였다.

원탄(原炭)은 19억5,600만톤으로 17.3% 증가하였다. 원유는 1억7,500만톤으로 2.9% 증가하였다.

중국에서는 2003년 제4/4분기, 석탄, 석유, 전력이 부족상태로 되었고 2004년에 들어서는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특히 전력의 공급균형이 크게 어긋났다.

이 때문에 당중앙, 국무원지도자들은 석탄, 전력, 석유의 공급, 수송, 수요에 대한 문제를 중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급히 긴급예산안을 제정하여 석탄, 전력, 석유의 공급, 수송, 수요와 관련된 업계, 지역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였다.

중국경제가 새로운 성장주기의 상승기에 들어섬에 따라 금년의 자원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 석탄의 공급부족은 더욱 심각하여 전력공급부족은 원칙적으로 완화되지 못하고 원유의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송전부분 '약간 개선'

한편, 중국의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하면 금년에도 송전부족범위는 축소되지 않겠지만 부족의 정도는 약간 개선될 전망이라고 한다. 동위원회의 邵秉仁 부주석이 밝혔다. 2004년에 중국 국내에서 가동을 시작한 발전유닛은 5천만kW로, 금년에 들어서도 일부의 신규유닛이 머지않아 조업을 개시하지만 경제의 고도성장에 더하여 전력사용구조의 조정 및 전원건설은 일정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송전부족 사황은 근본적으로는 호전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말에는 송전부족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과거 2년간 광범위에 걸쳤던 전력부족은 계절적, 단계적 부족이라는 상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전력회사(EDF) 부분 민영화, 풍랑속 출항

세계최대의 전력회사는 어디인가?

영국의 조사회사 데이터모니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판매전력량순으로 보아도, 발전설비용량순으로 보아도 제1위는 러시아의

RAO-UESR(러시아 통일전력시스템), 프랑스 전력회사(EDF)는 어느 순위로도 꼭 2위로, 3위 이하를 크게 뒤떨어뜨리고 있다. EDF의 고객수는 구주에 3,560만, 세계에서는 4,160만을 헤아린다. 전에는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하고 있었으나 근년에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구주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독일, ENBW사의 첫째주주가 되었다. 자유화범위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구주의 전력시장에서 리딩컴퍼니를 지향하고 있다.

국유기업이였던 EDF는 작년 11월에 정식으로 주식회사화 되었다. 노조의 대규모반대집회라든지 파리시내의 송전스톱 등 격심한 분규끝의 제1보였었다. 프랑스정부는 금후 2005년말까지에 EDF의 주식공개(부분민영화)를 실시할 생각(단, 정부소유주비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노조라든가 야당, 사회당의 완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주식회사화를 목전에 둔 작년 9월에 취임한 가드넥스 CEO는 경쟁력강화방침을 강력히 내세웠다. 금후 3년간에 그룹전체의 매상고를 2%증가시키고 구주시장의 약 4분의 1의 점유율을 획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를 위한 자금조달은 ① 주식회사화에 의한 증자 ② 자산매각 ③ 경비삭감 ④ 요금인상에 의할 생각. 이에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외에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 본사 : 프랑스 파리
- CEO : 피엘 가드넥스
- 연간매상고 : 약 449억유로
- 발전설비용량 : 약 1억2,257만kW
- 종업원수 : 약 16만7,300명